아시아교육연구 20권 3호
Asian Journal of Education
2019, Vol. 20, No. 3, pp. 853-882.
https://doi.org/10.15753/aje.2019.09.20.3.853

교육 공정성에 관한 미디어 담론 분석 : '숙명여고 사태'를 중심으로*

이혜정(李惠貞)**

논문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 공정성에 관한 미디어 담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교육 공정성의 의미와 한계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페어클로의 비판적 담론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시험 절차의 공정성 논의를 불러일으킨 '숙명여고 사태'에 관한 언론보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텍스트 분석 결과, 관련 기사들이 빠른 호흡의 어조로 '의혹', '확인', '발견' 등의 어휘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기사를 통해 문제유출 사실을 기정사실화하고, 이 사태를 한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대입제도 전반의 문제로 확대하는 경향과 관련된다. 둘째, 담론적 실천 분석 결과, 보수적 언론과 진보적 언론이 '숙명여고 사태'가 촉발시킨 대입제도 관련 입장이 대립적임에도 불구하고, 지배적인 담론은 학생부종합전형을 비롯한 수시 전형에 대해 비판적임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사회적 실천 분석 결과, '숙명여고 사태' 관련 미디어 담론은 이와 같은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시험 절차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대책들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으며, 능력주의에 기반 한 절차공정성이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를 반영·구성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절차적, 형식적 공정성 중심의 교육 공정성 담론은 학교가 시험 절차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통해 절차공정성을 보장하는 데에 집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공정한 경쟁의 결과는 개인이 책임져야할 것으로 여기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교육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 불평등은 절차적 공정성 추구로는 극복되지 않는다. 따라서 교육 공정성 담론은 절차에서의 중립성, 객관성을 넘어 교육 결과를 불평등하게 만드는 여러 요인들에 대한 논의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교육 공정성, '숙명여고 사태', 대입제도의 공정성, 교육불평등, 비판적 담론 분석

* 이 논문은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연구보고서『교육 '공정성'의 빛과 그림자: '숙명여고 사태'에 관한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2019)』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작성한 것임을 밝힙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서울 강남 명문 사립고로 알려져 있는 한 학교의 교무부장이 같은 학교에 다니던 쌍둥이 자녀들에게 시험문제와 답안을 유출한 정황이 포착된 '숙명여고 사태'는 2018년 하반기 가장 화제가 되었던 사건 중 하나이다. 사건이 알려지자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하였고, 검찰은 이 학교 교무부장 등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하였다(홍수민, 2019)[1]. 그런데 이러한 조사와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언론과 여론은 이 사태와 당사자들에 대한 거센 반감을 드러내었다[2]. 문제유출 의혹이 여론화되자, 학부모들은 해당 학교 앞에서 촛불집회를 시작했으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이미 문제유출을 기정사실화하여 '내신 비리' 문제로 이 사건을 규정하기도 했다(조선일보, 2018.9.27.). 이 논의의 중심에는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닌, 귀속적인 지위와 자원에 따라 대학 입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대중들의 불안이 있다. 즉, '공정하지 않은' 대학 입시에 대한 대중적인 불만이 '숙명여고 사태'를 계기로 표면화된 것이다.

이러한 공정성 논의는 한국사회의 교육을 논함에 있어 낯설지 않은 주제이다. 대통령 퇴진을 이끌어낸 촛불혁명의 시작도 특권을 이용하여 명문대에 입학한 사태[3]에 대한 대학생들의 문제제기로부터 있었다. 이는 권력과 특권에 대한 문제제기이기도 하지만, '공정하지 못한' 대입 결과에 대한 대중적인 반응이기도 하다. 이뿐만 아니라 2018년 공론화 과정을 통해 대입제도 개편의 방향이 정시 확대로 귀결된 것이나, 최근 학생부종합전형 등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 또한 능력에 따른 '공정한' 기회의 보장에 대한 대중들의 지향을 보여준다.

'공정(公正)하다'는 것은 사전적으로 공평하고 올바르다[4]는 의미이다. '공정'을 영어로 fairness 혹은 justice로 표기하는데, fairness는 '공평', '공정'으로 번역되고, justice는 '정의'로 번역되는 단어이다. 따라서 공정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상태를 포괄하는 것이며, 공정과 정의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념이다(엄석진·윤영근, 2012, p.23). 공평하고 올바르며 정의로운 상태는 민주주의가 지향해야 할 가치이며, 교육을 비롯한 공적 영역의 지향점이자 기준이다.

---

1) 홍수민(2019). 제2의 숙명여고? 서울 고등학교 9곳 의심 사례 적발돼. 중앙일보 2019.1.16. 기사.

2) "학교 주변에서 'A 씨의 두 딸이 전학을 간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사실이 아니었고 두 학생은 현재 이 학교에 재학 중이다. 이를 불만스럽게 여기는 학생도 있다. 숙명여고 2학년 F 양은 "두 학생이 다른 친구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줬는데도 징계나 처벌을 받지 않는 게 속이 상한다. 우리들끼리 뒷담화를 자주 한다"고 말했다(동아일보, 2018.9.15.)"

3) 천관율(2018)의 기사는 이를 "희대의 불공정 사태"로 명명한다. 이 기사에서는 촛불혁명의 핵심이 이 불공정 상황에 대한 대중들의 분노와 불만이었으며, 이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을 '공정의 아이콘'이었다고 분석한다.

4) 네이버 어학 사전(https://ko.dict.naver.com/seo.nhn?id=3402201).

최근, 공정성에 관한 논의가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라고 천명했으며[5], 비정규직 정규직화 논의나 역차별 논의 등에서 ‘공정성’을 화두로 삼은 토론들이 적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특히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공정성’에 관한 논의가 있어왔다. 한국사회에서 어떤 입시제도가 보다 공정한 제도일 수 있는가의 논의는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것이기는 하지만, 최근의 수능 절대평가나 수시 전형의 비중 관련 이슈들은 공정한 경쟁 절차에 관한 논의를 보다 활발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에서의 공정성 관련 논의들에 있어 ‘공정하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지, 교육 공정성이 학교교육을 비롯한 교육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등에 관한 분석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교육에서의 공정성 담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하는 하나의 시도이다. 이를 위해 최근 교육에서의 ‘공정성’ 논의를 수면 위로 드러낸 대표적인 사건인 ‘숙명여고 사태’에 관한 언론보도의 내용을 비판적 담론 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보도 내용은 대중들의 교육적 가치와 철학이 무엇인지 드러낼 수 있는 생생한 자료임과 동시에 세간의 공정성 담론이 어떤 논리를 바탕으로 하며, 그 한계는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에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한편, ‘담론(discourses)’은 특정 시기에 특정한 주제에 관한 지식을 표상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담론은 단지 지식을 표상하는 것만이 아니라 특정 현상에 대한 사고와 행동의 틀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조용환, 2001, p.8). 즉, 담론의 진술 체계는 표상을 통해 세계에 관한 지식을 제공하는 동시에 특정한 자기 정체화 방식을 제공한다(서덕희, 2006, p.81). 언어는 사고의 표현일 뿐 아니라 사고의 틀을 제공하고 지식을 만들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인 ‘숙명여고 사태’ 관련 미디어 담론은 사람들이 인식하는 교육 공정성의 내용과 범위를 반영함과 동시에 교육에서 어떤 상태를 공정한 상태로 여기는지에 대한 지식과 행동의 틀을 제시하는 힘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숙명여고 사태에 관한 비판적 담론 분석은 사람들이 교육에서의 공정함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과 더불어 그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이며, 교육 공정성을 둘러싼 담론이 구성되는 과정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방법

이 연구는 ‘숙명여고 사태’에 관한 언론보도 분석을 통해 이 사건을 둘러싼 교육 ‘공정성’의 내용

5)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취임식에서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 소통하는 대통령과 함께 공정한 대통령이 될 것을 천명했다. 이는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로 이어졌다(중앙일보, 2017.5.10. 기사). 이 대통령 취임사에서의 ‘공정’은 특권과 반칙이 없고, 상식적인 경쟁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과 의미, 한계를 도출하고자 했다. 더불어 언론보도에 드러난 '숙명여고 사태' 관련 담론의 상호작용을 살펴봄으로써 교육 공정성에 관한 논의가 담론 내부의 어떤 갈등과 긴장 속에서 구성되고 있는지 밝히고자 했다. 언론보도의 방식과 내용은 사회적 상황에 관한 담론을 생산하고, 그 담론에서 쓰이는 언어를 통해 특정 이념을 확산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유성상·권순정, 2016, p.75). 이 사태에 관한 언론보도 분석을 통해 관련 기사에 반영된 교육 '공정성'의 내용이 무엇이며, 이러한 공정성의 의미가 언론을 통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페어클로(2001)의 비판적 담론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비판적 담론 분석(CDA)은 1990년대 초반 이후 다양한 사회과학 분야에서 언어적 차원을 연구하는 이론과 방법론으로 널리 알려졌으며, '담론 분석을 통한 사회비판'이라는 실천적 목표를 가진 방법론이다(신진욱, 2016, pp.12-13). 이 방법론은 담론이 사회를 반영하여 구성됨과 동시에 사회를 구성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며, 담론의 '내용'과 '표현 방식' 모두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강지영·소경희, 2016, pp.4-5). 따라서 비판적 담론 분석은 담론의 내용과 방식이 사회의 어떤 권력 관계를 반영하는지, 담론을 통해 어떤 이데올로기를 형성하는지에 관심을 둔다(김영욱 외, 2017, pp.8-9).

페어클로의 비판적 담론 분석은 텍스트, 담론적 실천, 사회적 실천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이루어진다. 텍스트에 대한 분석이 언어학적인 분석이라면, 담론적 실천 분석은 텍스트의 생산, 분배, 소비의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실천은 텍스트에 작동하는, 혹은 텍스트가 구성하는 이데올로기와 헤게모니에 대한 분석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텍스트 분석은 문법, 어휘, 결합, 텍스트 구조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어떤 현상이 어떤 언어적 방식으로 표상되었는지를 탐색하는 것이다. 담론적 실천 분석은 텍스트와 사회적 실천 사이를 매개하는 것으로 언어학적 분석보다는 상호텍스트적 분석이다. 사회적 실천은 담론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어떤 사회적 질서와 관련되어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손홍숙, 2013, pp.167-169).

'숙명여고 사태'에 관한 미디어 담론 분석을 통해 교육 공정성 담론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하는 이 연구는 '숙명여고 사태'가 언론을 통해 어떻게 표상되며, 이것이 어떤 내용의 담론들과 연결되는지 그리고 이 담론적 실천이 갖는 이데올로기적 함의는 무엇인지를 밝혀보았다. 이를 위해 언론보도가 이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텍스트 분석), 관련 담론들은 어떻게 대립하고 있는지(담론적 실천 분석), 이것이 교육 공정성을 둘러싼 어떤 이데올로기와 연결되어 있는지(사회적 실천 분석)를 차례대로 분석했다.

이 연구에서 텍스트 분석을 통해 도출하고 했던 것은 '언론보도에서 사용된 어휘들과 어조는 숙명여고 사태를 어떻게 표상하고 있는가?'이다. 이를 위해 기사들의 표현과 어조, 주요 내용 등을 분석하였다. 담론적 실천 분석을 통해 밝히고자 했던 것은 언론보도 분석을 통해 드러나는 담론 간 상호작용이었다. 이는 '숙명여고 사태' 관련 미디어 담론이 촉발한 대입제도 관련 쟁점을 둘러싼 모종의 긴장과 갈등을 보여줄 수 있으며, 이는 교육 공정성의 의미와 논리체계가 구성·재구성되는 과정이라

고 볼 수 있다. 요컨대, 담론적 실천 분석은 사회적 맥락 속에서 교육 공정성이 의미하는 바가 어떤 갈등 속에서 지배적인 담론을 구성해 가는지 드러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실천 분석은 '숙명여고 사태 관련 언론보도에서 드러난 교육 공정성은 어떤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가?'를 밝히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기사가 생산되고 분배되는 과정에서 개입되거나 형성되는 교육 관련 이데올로기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이 되는 언론보도는 시험지 유출 의혹이 제기되었던 2018년 7월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중앙지에 보도된 관련 기사이다. 자료 수집을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www.bigkinds.or.kr) 서비스[6]가 제공하는 중앙지[7] 중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의 기사를 '숙명여고'가 포함된 형태소 분석 방법[8]으로 검색하였다. 언론보도 내용 중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등의 중앙 일간지 기사를 분석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 매체들이 대중들에 대한 파급력과 영향력이 비교적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신문사들은 교육에 관한 소위 진보적 관점과 보수적 관점을 각각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숙명여고 사태'에서 드러난 '공정성' 관련 논의를 다른 관점에서 다룰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되었다.

검색 결과, 관련 기사의 수는 239건이었고, 이 중 사회면 기사가 20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기사들을 모두 검토하여 관련성이 없는 기사를 제외한 180건을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분석 대상 기사는 보도 날짜, 언론사, 기사 내용 등으로 분류하였고 보도(report)와 논평(editorial) 및 기획(feature) 기사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언론사별, 기사 종류별 분류에 따라 기사 건수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언론사 및 기사 유형 별 기사 건 수

	보도 기사	논평	기획 기사	계
조선일보	44	3	0	47
동아일보	64	9	3	76
경향신문	38	9	0	47
한겨레신문	7	2	1	9
계	153	23	4	180

기사 유형으로 분류해보면 보도 기사가 153건으로 가장 많고, 논평 기사와 기획기사가 23건과 4건이었다. 언론사별로는 동아일보가 76건의 기사를 보도했고,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이 각 47건씩, 한겨레신문은 9건의 기사를 보도했음을 알 수 있었다.

6) 빅카인즈는 중앙지, 경제지, 지역종합지, 방송사에서 보도된 기사들을 모아놓은 데이터베이스이다.
7) 빅카인즈에서 제공하는 중앙지는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이다.
8) 대상 문장 혹은 어절을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단위인 '형태소'를 단위로 분절하여 검색하는 방식이다.

Ⅱ. 이론적 배경: 교육과 '공정성'

1. '공정성'의 의미

사전적으로는 '공평하고 올바르다'라는 의미의 '공정하다'라는 말은 이론적, 실천적 맥락에서 다양한 뜻을 내포하고 있다. 혹자는 '공정'을 '정의'와 동의어로 보기도 하고, 혹자는 '공정'을 불평등한 상태를 개선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이론적으로는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논의에 따라 공정한 상태에 대한 정의와 내용이 다르다.

교육 분야에서는 공정한 기회의 보장과 결과에서의 공정성 논의가 있어 왔고, 경제 분야에서는 소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독과점 상태를 지양하고 기업의 자유 경쟁을 촉진하여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것을 공정한 경제 질서로 여기기도 한다[9]. 정부 차원에서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공정사회'를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면서, 각계에서 공정성에 대한 강조를 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2018년 9월 '혁신적 포용국가'를 사회정책 분야 비전으로 제시하고(황예랑·성연철, 2018),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함(성연철, 2018)을 강조했다.

이와 같이, 이론적·실천적 맥락에서 규정되고 있는 공정성 개념은 매우 다양하며, 사회적 맥락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 즉, 공정성 개념은 선험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마르크스 또한 특정 생산양식의 맥락에서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의 공정성을 논의했다. 그에 따르면, 모든 형태의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자연적 공정성' 규칙이나 교훈은 존재하지 않으며, 공정성은 보편적인 원칙이 아닌, 역사적으로 조건 지어진 생산 양식의 요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석현호, 1997, p.29). 뿐만 아니라, 한 사회 내에서도 구성원의 조건과 위치에 따라 공정성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예컨대, 자본주의 사회의 피지배계급인 프롤레타리아는 사회를 지배하는 공정성 원칙과는 다른 원칙을 발전시키고 현재의 질서를 또 다른 공정성의 원칙으로 비판할 수 있다(석현호, 1997, p.32). 즉, 공정성은 사회 내에서 다른 위치를 가진 구성원들에 의하여 공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요구들 간 논의와 협상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석현호, 1997, p.68).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정성 논의에서도 우리 사회의 정치·사회적 맥락 및 구성원의 입장· 위치에 따라 그 의미는 변화될 수 있으며, 이는 계속하여 규정·재규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9) 관련하여 제정된 법이 공정거래법임. 이 법의 정식 명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1980년 12월 31일 제정되었다. 이 법에 의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공정거래위원회를 두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99323&cid=43665&categoryId=43665)

2. 공정성 관련 이론

1) 분배공정성 이론과 절차공정성 이론

공정성 관련 이론은 크게 분배공정성(distributive justice) 이론과 절차공정성(procedural justice) 이론으로 나눌 수 있다. 분배공정성은 투입한 노력과 그 보상의 비율이 준거 대상인 타인과 얼마나 일치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보상의 크기이며, 수행된 업무에 상응하는 결과의 공정성을 의미한다(엄석진·윤영근, 2012, p.24). 이 이론은 교환이론[10]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투입 대비 산출의 양을 직접적인 교환 대상과 비교하기도 하고, 유사한 지위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기도 한다(석현호, 1997, pp.40~46).

분배공정성 이론을 보다 체계화한 것은 에코프(Eckhoff, 1974)인데, 배분에 적용되는 평등의 원칙으로 객관적 평등, 주관적 평등, 상대적 평등, 서열적 평등 그리고 기회의 평등을 제시했다(석현호, 1997, pp.46~47). 호크실드(Hochschild, 1981)는 분배공정성의 규범을 평등의 원리와 차별의 원리로 구분한다. 전자는 개인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자원의 평등한 배분이 정당하다고 보며, 후자는 개인 간 차이가 불평등한 배분을 정당화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분배공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다양한 평등 개념을 제시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박종민, 1997, pp.176~178).

〈표 2〉 분배공정성 판단 기준

기준	내용
절대적 평등의 기준	모든 개인은 동일한 양의 자원을 배분받아야 함. 프랑스 혁명가들의 주장과 유사함.
필요의 기준	개인의 욕구 혹은 필요에 따른 배분이 공정함.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공정성 개념임.
투자의 기준	개인은 공동체에 투자한 것에 비례하여 보상을 받아야 함. 예컨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보상을 많이 받아야 함.
결과의 기준	개인은 생산성 혹은 사회적 기여에 비례해서 보상을 받아야 함. 투자 기준이 아니라 결과의 산출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보상받는 것임.
귀속의 기준	개인은 귀속적 특성, 즉 성, 연령, 계급, 종교 등에 따라 보상받아야 함.
절차의 기준	개인은 특정한 과정의 결과에 따라 보상받아야 함.

에코프와 호크실드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 분배공정성의 의미는 어떤 상태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분배공정성은 사회·정치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며, 그 평가는 같은 사회 내에서도 구성원의 지위와 입장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개인의 학력(學歷)에

10) 교환이론은 사회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이론으로 구조적·거시적 관점의 갈등론과 비교되며, 구조기능주의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김봉석, 2010: 973).

따라 보상의 정도가 달라져야 한다는 인식은 호크실드의 판단 기준 중 '투자의 기준'에 따라 분배공정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절대적 평등의 기준'이나 '필요의 기준'으로 보면, 불공정한 것이다. 그리고 개인의 학력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는 것은 학력·학벌 차별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분배공정성은 그 기준에 따라서 공정함의 여부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절차공정성 이론은 분배가 결정되는 방법, 즉 절차에 주목하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분배의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하며, 절차의 공정성이 보장될 경우, 결과는 공정하고 정의로울 수 있다고 본다(엄석진·윤영근, 2012, p.24). 공정한 절차는 그 결과와 독립적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논자들도 있지만, 실제 개인들은 주어진 상황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가장 잘 충족될 수 있는 절차 혹은 규칙을 선호하며, 이를 배분선호이론이라고 한다(석현호, 1997, p.51).

절차의 공정함을 중요시하는 것은 절차 자체에 집중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경쟁의 구조와 분배 결과에 대한 논의를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절차공정성 논의에서는 평등과 정의를 공정성과 연결시키는 관점이 간과될 가능성이 있다.

2) 존 롤즈(John Rawls)의 공정으로서의 정의

'공정'의 문제를 정의의 문제와 연결시키는 대표적인 논의는 존 롤즈의 '정의론'이다. 그는 저서 『공정으로서의 정의』에서 정의의 개념에 있어 기본적인 관념은 공정이며, 이 관점에서 정의 개념을 분석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Rawls, 2010, p.11). 존 롤즈에게 정의의 두 원칙은 각 개인의 평등한 권리와 불평등에 대한 제한적인 인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Rawls, 2010, p.112). 요컨대, 롤즈에게 '정의'란, 개인들 간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할당함에 있어 부당한 차별을 두지 않고, 사회생활의 이득에 대한 상충되는 요구를 적절하게 조정해줄 규칙이다(Rawls, 2013). 이와 같이 그에게 '정의'는 평등, 차별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롤즈는 특정 규율체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어떤 요구를 해서 이득을 보거나 그 요구에 굴복하도록 강요했다고 아무도 느끼지 않는다면, 그 규율체계는 공정하다고 보았다(Rawls, 2010, p.26).

존 롤즈에게 평등의 진정한 보장은 절차적 전제보다는 정의의 원칙에 담긴 내용에 따르는 것이다(조경원, 1991, p.110). 롤즈의 평등 논의를 잘 드러내는 것이 '차등의 원칙'이다. 이 원칙은 최소극대화 전략[11]에 의해 보다 평등주의적 체제를 택함으로써 한 사회 내에서 가장 적은 자원을 배분받는 사람인 최소수혜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한 어떤 불평등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조경원, 1991,

11) 이는 최악의 경우 발생 가능한 손실(최대 손실)을 최소화 한다는 의사결정 원칙이다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B5%9C%EC%86%8C%EA%B7%B9%EB%8C%80%ED%99%94). 이 전략은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결과를 비교하여 그 중에서 가장 덜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pp.115~116). 다시 말해, 능력에 따른 차이를 사회 전체를 위해, 그리고 뛰어난 능력을 타고나지 못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쓰이도록 하는 것이다. 사회 구성원의 능력으로 얻어낸 이익을 전체 공동체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롤즈의 차등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김천기, 2015, p.8).

롤즈는 절차적 공정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한데, 그에게 절차공정성은 원초적 입장에 놓여있는 합의 당사자들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원초적 입장이란 사회적 지위, 정신적·신체적 능력, 성격, 가치관 등이 무지의 베일에 싸여있는 상태이다(Rawls, 2003). 즉, 롤즈는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에게 유리한 절차를 선택하지 않을 조건이 될 때에만 절차적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다고 보았다.

롤즈가 구분한 사회체제 중 민주주의적 평등(democratic equality)은 공정한 기회균등과 차등의 원칙이 결합된 것으로 이 체제에서는 공정한 기회균등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 우연성을 배제한다. 이 자연적 우연성의 하나로 각 개인의 천부적 자질과 능력을 포함시키는데, 이는 개인의 능력이 우연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의 능력은 개인의 자원이 아니라 사회공동의 자산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 체제에서는 최소수혜자의 입장에서 사회적 가치와 자원의 분배공정성을 판단하고, 이들의 기대치를 향상시키려는 방향을 추구한다(조경원, 1991). 따라서 롤즈는 절차적 형식적 기회균등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에게 실질적인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는 공정한 기회균등을 중요시하며, 개인의 능력과 재능을 자원 분배의 기준으로 보는 능력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3. 교육에서의 '공정성' 관련 논의

모든 구성원에 대한 공정한 기회 부여는 공정한 사회의 최소 조건이다. 교육 공정성을 논의함에 있어서도 모든 구성원의 귀속적 지위와 무관하게 교육의 기회가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함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2009년 한국종합사회조사에 따르면, 한국사회에서 교육 기회가 평등하게 보장되고 있냐는 문항에 대해 국민 48.6%가 평등하다는 응답을 했고, 교육 기회가 불평등하다고 응답한 국민은 27.7%였다(신동준, 2012, p.166). 한국사회는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교육의 모든 단계에서 취학률 80% 이상에 도달했기 때문에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교육 기회가 보장된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런데 같은 조사에서 불평등의 맥락과 함께 교육기회의 공정성을 질문하자,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응답했다. 소위 '명문고'를 졸업한 학생이 대학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다는 의견과 부자만이 대학 학비를 감당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소득 수준이 낮은 집단은 절반 이상이 동의했지만, 소득 수준이 높은 집단의 동의 수준은 이에 비해 낮았다(신동준, 2012, pp.174-175)[12]. 이는 대다수의

12) 상층은 좋은 중고교 출신일수록 대학 교육 기회가 많다는 것에 대해 44%가 동의한 것에 비해 하층은 56.3%가 동의했다. 부자만이 대학 학비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층의 51%, 하층의 61.2%가 동의했다

구성원들이 형식적 기회의 측면에서는 교육의 공정성이 보장되지만 교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적인 요인들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고 인식함을 보여준다.

롤즈의 논의를 여기에 비추어보면, 한국사회의 대다수 사람들은 교육에 있어 형식적 기회균등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정한 교육 기회균등에 이르지 못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형식적으로는 모든 구성원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지만, 대입이라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교육기회가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신동준, 2012, p.181).

한편, 최근 발표된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 중 학종 공정성 제고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설문에 참여한 교사들이 공정성 제고 방안으로 가장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항목은 대학의 평가기준 공개(5점 척도 중 4.57점), 입시비리 처벌 강화(4.47점)였다[13]. 이는 현재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이 확보되고 있지 않다는 세간의 평가를 반영하는 것이며, 학종의 공정성은 평가 기준의 투명성과 입시 비리에 대한 처벌 등 평가 절차를 정비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을 드러낸다. 이와 같이, 교육에서의 공정성을 좁은 의미로 보면, 형식적 기회 평등과 경쟁 과정에 있어서 절차를 객관화·표준화하는 것이 공정성 확보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공정한 경쟁을 위한 조건들이 평등 한가'의 문제로 확대해보면 교육 공정성의 문제가 간단치 않음을 알 수 있다.

'숙명여고 사태'는 대입제도의 절차를 둘러싼 공정성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논의한 계기였으며 이를 통해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육 공정성 의미가 무엇인지 드러난 시공간이었다. 이 사건을 둘러싼 담론에 대한 비판적 분석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논의되는 교육 공정성의 내용과 논리체계, 그 한계를 밝히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II. '숙명여고 사태'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결과

1. 텍스트 분석: 빠른 호흡의 구체적이고 생생한 수사 관련 보도

'숙명여고 사태' 관련 수사는 7월 말 문제유출 의혹이 제기되어 11월 말 최종 수사 결과 발표까지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14].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듯, 180건의 분석 대상 기사 중 새로운 사실과 발

(신동준, 2012, pp.174-175).

13) 구무서(2019). 高교사들 "학종 공정성 위해 대학 평가기준 공개해야." 뉴시스 2019년 1월 17일 기사.

14) 이 사건은 2018년 7월 24일, 숙명여고 문제유출 의혹 관련 민원글이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올라오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에 8월 13일 숙명여고는 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했다. 8월 16일, 서울시교육청은 특별감사를 시작했고, 다음 날 교육부는 고교 교원이 자녀 학교에 배치되는 것을 금지하는 '상피제' 도입을 결정했다. 8월 29일에는 서울시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여기서 교육청은 문제유출 개연성은 확인했으나 물증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해당 교사 및 교장, 교감 등 4인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으며, 9월 5일에는 숙명여고와 해당 교사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9월 14일에는 해

견을 전달하는 보도 기사가 153건으로 가장 많다(약 85%). 보도 기사는 크게 수사의 과정 및 결과에 관한 보도와 해당 학교와 당사들의 상황, 관련 정책 변화에 대한 보도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중 수사 관련 보도는 74건으로 보도 기사의 약 48%를 차지한다. 수사 관련 기사가 보도된 시기와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 언론사들이 수사의 구체적인 과정과 그 결과를 경쟁적으로 보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도 일자별로 기사 건수와 내용을 분석한 결과, 수사의 진전이나 변화가 있었던 시기에 보도된 기사 건수가 최소 4건에서 최대 17건까지 다른 때에 비하여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수사 관련 기사 수가 급증했던 시기

일자	기사 건수	내용
2018.9.5.	4	학교와 해당 교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진행
2018.9.26./ 10.15.	4/ 5	해당 학생들 입건
2018.10.16./ 10.29.	4/ 6	수사 결과 문제유출 증거 포착
2018.11.2./ 11.5./ 11.6./ 11.7.	7/ 4/ 9/ 7	해당 교사에 대한 영장 신청과 구속
2018.11.12./ 11.13.	17/ 15	수사 결과 문제유출 결론 도출

수사 관련 보도 기사들은 수사 과정을 긴박한 어조로 보도하는 특징을 보인다. 사건의 성격 상, 용의자의 도주나 또 다른 피해가 예상되는 등의 시급성을 실제로는 갖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의 과정과 세세한 결과를 빠른 호흡의 언어로 전달하는 것이다. 기사들이 보여주는 빠른 호흡은 관련 정보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예컨대, 문제유출 증거와 사실에 관한 보도 기사들은 해당 교사와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유출하고 이를 기록·활용하였는지에 관해 이야기한다. 문제유출 사실을 처음 확인한 수사 결과에 관한 기사에서 언론사들은 휴대폰에 시험 관련된 메모가 있었음을 보도(조선일보, 2018.10.15.; 2018.10.16.)할 뿐만 아니라, 그 메모가 어떤 과목(영어, 문학)의 문제 중 어떤 부분(지문)에 관한 것이었는지(동아일보, 2018.10.16.)까지도 밝히고 있다.

> 시험문제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강남구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 씨의 쌍둥이 딸 휴대전화에서 '영어'와 '문학' 시험에 사용된 지문이 나왔다. 16일 채널A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A 씨와 쌍둥이 딸의 휴대전화 메모 프로그램을 복원한 결과 시험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저장됐던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당 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했고, 참고인에 대한 조사도 함께 했다. 10월 15일, 경찰은 휴대전화 증거 조사 결과, 문제유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발표했고, 이에 따라 해당 학생들은 피의자로 전환되어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11월 2일 경찰은 해당 교사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11월 12일 총 5차례의 문제유출을 확인하였음을 발표했다. 한편, 해당 학교는 11월 13일 해당 학생들의 성적을 0점 처리하기로 결정했고, 11월 30일에는 해당 학생에 대한 퇴학 결정, 12월 21일에는 해당 교사에 대한 파면 결정을 했다.

'영어'와 '문학' 시험에 사용된 지문이었다. 경찰은 "영어와 문학 지문의 상당수가 1학기 기말고사에 출제된 문제들과 동일했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A 씨가 쌍둥이 자매에게 시험 문제 지문을 알려줬는지를 조사하고 있다(동아일보, 2018.10.16.).

그리고 이러한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문제유출의 증거로 보일 수 있는 정황들을 '의혹', '조사 결과', '확인' 등의 어휘를 자주 사용한다. 실제로는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들이 문제유출 사실을 확증하는 것이 아님에도 '발견', '확인' 등의 어휘를 반복하여 사용함으로써 사건에 대한 판단을 한쪽으로 몰아가는 경향을 보인다.

숙명여고 시험 문제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쌍둥이 자매 중 한 명의 휴대전화에서 영어 시험 문제의 정답이 저장돼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쌍둥이 자매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한 결과, 쌍둥이 동생의 휴대전화에서 영어 시험 문제의 정답이 메모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29일 밝혔다. 시험문제는 괄호 속에 영어단어를 넣는 것이었는데, 이 문제의 답(단어)만 그대로 적혀있었던 것이다(조선일보, 2018.10.29.).

이뿐만 아니라, 일부 기사는 해당 학생들의 핸드폰 메모와 시험지 메모 및 자택에서 발견된 메모지의 이미지까지 경찰서의 자료 협조를 받아 보도하기도 했다. 이렇게 매우 구체적인 문제유출의 정황과 증거를 보도하는 경향은 문제유출이 확실하다고 결론짓고 해당교사를 구속기소하는 11월 30일까지 계속되었다.

이 사건에 대한 보도 기사는 문제유출 의혹을 둘러싼 수사의 방식과 내용, 결과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수사와 관련된 부수적인 사실들까지도 일일이 보도하고 있다. 예컨대, 해당 교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경향신문, 2018.9.19.), 조사 받던 해당 학생 중 한 명의 호흡곤란 상태(경향신문, 2018.10.6.; 동아일보, 2018.10.6.), 해당 학생 중 한 명의 입원으로 수사 차질 예상(조선일보, 2018.10.17.), 사건 담당 검찰 소속 부서(조선일보, 2018.11.3.) 등의 사실들도 경쟁적으로 보도되었다[15].

나아가 일부 기사는 수사가 종결되기 전임에도 문제유출이 사실일 것이라는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경찰이 2018년 10월 15일 압수수색한 증거에 대한 조사 결과, 문제유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고, 이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해당 교사와 학생들이 문제유출 사실을 부인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기사는 학원가의 이야기를 빌어 문제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추정했다.

전교생 대부분이 '목숨 걸고' 공부하는 강남에서, 한번에 100등씩 올리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

15)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검찰 또한 적지 않은 부담감을 갖기도 했음. 동아일보 2018년 9월 15일자 기사에 의하면 수사 초기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 수사에 대해 "시교육청 감사 결과와 별반 다르지 않은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가는 여론의 뭇매를 맞을 가능성이 높아 걱정이 크다. 주말도 없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에 매진하고 있다(동아일보, 2018.9.15.)"고 이야기했음.

는 것이다. 학원가에서는 "강남에서 내신 경쟁은 러닝 머신 위에서 뛰는 것과 같다"는 비유가 있다. 3학년까지 아무리 달려도 제자리라는 얘기다(조선일보, 2018.10.29.).

조선일보 2018년 10월 29일자 기사에서는 강남 고등학교의 내신 경쟁을 “러닝머신에서의 달리기”에 비유하며, 내신 성적이 갑작스럽게 오르는 것은 불가능함을 역설했다[16]. 이러한 기사 내용은 아직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독자가 문제유출 사실을 확신하게 할 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을 “목숨 걸고 공부하는” 내신 경쟁의 룰을 어긴 중대한 사건으로 인식하게 만들 수 있다.

‘숙명여고 사태’에 관한 언론보도에서 사용된 어휘와 어조들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의 기사들이 관련 수사 과정과 내용을 빠른 호흡으로 구체적인 수사 과정과 결과를 제시하며 경쟁적으로 보도함을 알 수 있었다. 이 보도 기사들은 수사의 국면이 변화될 때마다 ‘의혹’, ‘확인’, ‘발견’ 등의 어휘를 반복하여 사용하며 수사 과정과 결과를 발표했다. 그리고 강남 지역에서 내신 성적의 급격한 상승은 “기적에 가까운” 불가능한 일임을 강조해서 보도함으로써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유출을 기정사실화했다.

이러한 보도 기사의 내용과 방식은 해당 학교의 상황과 분위기를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관련 학생, 학부모의 분노와 불안을 두드러지게 드러내는 것(동아일보, 2018.9.15.)과도 관련이 있다. 일부 기사들은 문제유출 사실을 부정하는 해당 교사에 대한 분노는 물론, 사건이 언론에 노출된 이후에도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해당 학생들에 대한 분노(동아일보, 2018.11.5.), 자퇴서를 낸 것에 대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만(동아일보, 2018.11.9.) 등을 보도했다[17].

이와 같이, 사건 관련 수사 과정과 결과를 빠른 호흡의, 구체적인 보도 기사를 통해 발표하고, 여기에 사람들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생생하게 드러내는 기사들이 보도된 것은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계속하여 환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숙명여고 사태’가 단순히 한 학교에서 일어난 내신 시험 관련 사건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대입경쟁 절차와 관련된 논의를 촉발시켜나가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수사 과정과 결과 중심의 보도 기사들은 대입경쟁 절차의 불공정은 곧 교육 공정성의 훼손이며, 이는 심각한 교육 문제임을 대중들에게 반복하여 이야기했다.

---

16) 동아일보 2018년 9월 15일자 기사 또한 “사교육 1번지인 대치동 학원가와 가까운 숙명여고에서 (중략) 내신 성적을 사수하려 ‘공부 기계’로 살아온 학생들에게 100등을 건너뛰는 건 상상 불가”라고 언급하며, 문제유출 가능성이 높음을 암시하기도 했다.

17) 실제로 사건에 대한 해당 학교 학부모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분노와 불안은 일련의 행동으로 표출되기도 했다. 해당 학교 앞에서는 8월 말부터 학부모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촛불집회가 열렸고, 학부모와 졸업생 중 일부는 ‘숙명여고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를 구성하여 활동을 했다. 촛불집회에서는 검찰이 문제유출 증거를 확보한 2018년 10월 15일 이전에 이미 “내신 비리 OUT”, 관계자 처벌 등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는 교육청의 감사 및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이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판단은 이미 내려져있었으며 그 분노와 불안이 적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숙명여고 사태는 대학 입시의 '불공정함'에 대한 대중들의 분노가 표출된 계기였으며, 이 사태에 관한 언론보도의 내용과 방식은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강남의 한 학교에서 윤리성 결여와 관리부실의 결과로 벌어진 하나의 사건이 교육 '공정성' 훼손의 결정적 사례로 여겨지는 데에는 대중들의 묵은 감정의 표출과 더불어 언론보도의 역할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 기사들은 수사의 과정과 결과, 사건 관련 대중들의 분노를 두드러지게 드러냄으로써 내신시험 문제 유출은 곧 교육 공정성의 훼손이며 이는 무엇보다 중요한 교육 문제라는 여론을 드러내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대입 경쟁의 절차는 공정해야하며, 이것이 교육 공정성의 핵심적인 문제라는 인식을 확대 재생산했다고 할 수 있다.

2. 담론적 실천 분석: 대입제도를 둘러싼 담론 대립

'숙명여고 사태'가 여론화되어 수사가 마무리되기까지 약 4개월 동안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의 기사들은 보수/진보 관점과 무관하게 문제유출 관련 수사 과정과 결과에 대해 경쟁적으로 보도했다. 그런데 사건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난 후에는 보수적 관점의 신문사들은 '숙명여고 사태'와 같은 내신 시험 문제 유출 사건의 기저에는 수시 전형의 비율이 확대[18]되어온 대입제도의 변화가 있음을 지적하기 시작했으며, 진보적 관점의 신문사들은 이러한 수시 전형에 대한 비판에 대한 대응과 반박을 내용으로 하는 기사들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대학입시에서 수시 전형 확대를 우려하며, 정시 전형을 지지하는 기사들은 주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기사이다. 이 기사들은 '숙명여고 사태'에서 보여주는 바, 내신 시험을 출제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수시 전형에 대해 비판적이다. 이러한 내신 비리는 성적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동일한 조건으로 치르는 획일적인 시험인 수능시험이 더 적절하다는 것이다(동아일보, 2018.11.16.). 동아일보 2018년 11월 13일자 칼럼의 경우는 다양한 역량과 인성까지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의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내신 성적과 학종에 대한 불신이 커진다는 것은 대입 경쟁 절차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진단한다. 여기서는 학종이라는 대입전형이 신뢰와 공정성을 얻지 못한다면 그 좋은 취지는 "빛 좋은 개살구"와 같이 실효성이 적다는 것을 지적한다.

정시 확대를 반대하는 기사들은 주로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을 통해 보도되었다. 이 기사들은 수능 위주의 대입 전형이 사교육에 더욱 의존하게 만들고, "시험 성적에 매달리는 우리 교육의 병폐를 더욱 심화시킬(경향신문, 2018.11.12.)"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학종은 교과의 본질에 충실한 수업을 할 수 있는 입시 제도임을 주장하며, 선다형 시험 자체가 치열한 경쟁과 교육의 획일화를 가지고 온다는 사실을 지적하기도 한다(한겨레, 2018.12.25.). 이와 같이, 대입 전형에 있어 정시 확대를 반

18) 2019년의 경우, 76.2%가 수시모집으로 선발될 예정이다.

대하는 입장은 선다형 시험이 교육 현장을 황폐화하고 미래형 창의 인재를 길러내기에 적합하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데 반해, 정시 확대를 주장하는 입장은 경쟁 절차의 공정성을 중요한 가치로 내세웠다.

그런데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경우, '숙명여고 사태'와 같은 내신 시험 비리의 문제점을 근거로 일관되게 학생부종합전형을 포함한 수시 전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것에 비해, 경향신문은 일부 기사에서 학종을 비판하는 논조를 보여주기도 한다. 예컨대, 경향신문 9월 16일 기자칼럼에서는 대입 전형에서 내신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내신 경쟁의 불공정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지적했고, 학종은 뒤늦게 철들어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패자부활전'을 허용하지 않는 전형임을 주장했다(경향신문, 2018.9.16.). 그리고 경향신문 2018년 10월 1일자 기획기사는 대입제도에 대한 입장이 상이한 교사, 사교육 종사자 등이 참여한 좌담회 내용을 보도하면서, 고교서열화와 학종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싣기도 했다.

> 학종이야말로 극악한 줄세우기다. 학종의 토대인 미국의 입학사정관제는 좋은 고교를 우대하는 불평등을 전제로 한다. 좋은 기숙학교를 다녀야 좋은 대학에 가는 식이다. 학종은 자사고와 궁합이 잘 맞는다. 현재의 체제에서는 교과 성적이 나쁘면 교사들이 비교과 항목인 세부특기사항에서도 좋게 써주지 않는다(경향신문, 2018.10.1.).

이 기사에서는 사교육 전문가의 의견으로 학종이 "극악한 줄세우기"라는 주장을 보도하고 있다. 이는 보수적 관점의 언론사와 진보적 관점의 언론사가 대입제도 개선에 있어 정시 확대를 둘러싼 대립적인 담론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부종합전형을 비롯한 수시 전형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의 담론이 보다 지배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담론적 실천은 '숙명여고 사태'에 관한 미디어 담론이 결과적으로는 능력주의에 기반 한 절차공정성을 강조하는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구성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3. 사회적 실천 분석

1) 절차공정성 완비를 통한 교육 '공정성' 회복

'숙명여고 사태' 관련 언론보도에서 '공정성'이라는 표현이 공식적으로 처음 등장한 것은 11월 13일 조희연 교육감의 입장문을 통해서이다. "타협할 수 없는 가치, '학업성적의 공정성'"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은 '공정성'을 "학업성적 관리의 절대 가치"로 규정하며 이번 사태를 공정성 "훼손"과 공교육에 대한 신뢰 상실 사건으로 해석한다.

> 이번 숙명여고 문제유출 사건은 '공정성'이라는 학업성적 관리의 절대 가치를 훼손하고 이로 인해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해, '관련자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중략) 공교육 전체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한 이번 비리의 위중함을 고려할 때,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학생에 대한 퇴학과 수사 결과에서 적시된 문제 유출 학기 전체에 대한 성적 재산정'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권고하며, 해당 학교가 위 조치를 현시점에서 즉각 실시하도록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중략) 수많은 학생들의 노력과 땀의 결과인 학업성적의 공정성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노력의 과정이 공정한 결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성적비리에 대해서는 물러섬 없이 단호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19].

여기서 조희연 교육감은 "학업성적의 공정성"은 "노력의 과정이 공정한 결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문제유출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자에 대한 처벌과 시험 절차를 감독하는 체제를 보다 엄격하게 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렇게 내신 시험 절차에 있어 공정함을 제고하고자 하는 논의에서 교육 '공정성'은 곧 학업성적의 공정성을 의미하며, 그것은 노력한 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적 공정성을 완비하는 것이다. 2018년 11월 8일 동아일보 사설의 제목인 "'공정한 입시' 뿌리 흔드는 구멍 난 내신관리"라는 표현은 내신 시험의 비리가 곧 공정한 입시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여겨짐을 보여준다. 이러한 언론보도에서 '숙명여고 사태'는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절차의 공정성의 완비가 필수적임을 확인하고 강조하기에 더없이 적절한 사례로 의미화 된다.

실제로 해당 학교는 사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속에서 시험 절차와 관련된 공정성을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시도했다. 학교 방문을 위해서는 사전 허가가 있어야 하고, 교무실은 학생 출입조차도 통제되었다. 학교는 평가관리실, 인쇄실 등과 시험지가 이동하는 모든 통로에 CCTV 9대를 추가 설치했고, 시험지와 관련된 모든 업무는 2명 이상의 교사가 함께 하는 '이중감시체제'를 도입했다. 시험문제 출제도 5~6명의 교과 담당 교사가 함께 1주일간의 회의를 거쳐 문제 출제를 하게 했다(조선일보, 2018.9.27.).

한편, 이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어 세간의 관심을 받으면서, '내신 부정'이 해당 학교만의 일이 아님이 보도되기 시작했다(동아일보, 2018.11.3.)[20]. 이에 따라 교육청과 교육부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들을 내어놓았다.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사건과 관련하여 교사와 자녀가

19) 서울교육소식 보도자료 "숙명여고 문제유출 사건 처리에 관한 서울특별시 교육감 입장문(2018.11.13.)" http://enews.sen.go.kr/news/view.do?bbsSn=158498&step1=3&step2=1

20) 실제 교육부가 공개한 초중고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평가·학생부 관련 중대비위 현황' 중 고교 시험지 유출이 2015년부터 4년간 13건이 적발되었다. 학생부 기재·관리 부정의 경우는 관련 규정을 어기거나, 부당하게 정정, 허위 기재, 출결 관리 미비 등으로 문제가 되었다(경향신문, 2018.11.17.; 조선일보, 2018.11.18.; 동아일보, 2018.11.18.).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히며, 평가문제 인쇄실 CCTV 설치, 평가, 인쇄, 성적처리 공간 분리 및 출입관리대장 설치 등 강화된 학업성적관리지침 준수를 위한 전수점검을 실시하겠다고 했다(동아일보, 2018.11.13.). 교육부도 시험 절차의 철저한 감독과 감시체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 지난 12월 11일에 있었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교육부는 숙명여고 사태 등으로 인하여 실추된 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 '교육 신뢰 회복 추진팀(가칭)'을 만들고 상피제 도입과 사립학교 학사비리에 대한 징계 철저화 등을 제시했다(한겨레, 2018.12.11.).

교육청과 교육부가 시험 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제시한 방안들은 시험을 둘러싼 교직원의 업무를 미시적으로 감시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교육 당국의 이러한 방침은 학교 현장에 대한 감찰과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실추된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겨진다.

한편,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학부모들의 목소리는 시종일관 내신 비리와 절차의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에 집중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자신의 자녀들이 내신 성적에 있어 손해 보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동기가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당 학교 학부모들은 검찰에 대해 중간고사 전에 수사를 끝내기를 요구했고(동아일보, 2018년 9월 10일), 숙명여고 학부모와 졸업생으로 구성된 '숙명여고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해당 교사에 대한 파면과 전·현직 교사 졸업생 자녀의 대입 진학 실적 및 내신 성적 공개를 요구했다(동아일보, 2018.10.19.). 그리고 2018년 10월 22일에 열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들은 해당 학생의 성적을 0점 처리해야 성적 산출이 공정해진다고 주장(동아일보 2018.10.23.)했다.

> '강남 8학군'에 위치한 숙명여고의 내신 경쟁은 치열하다. 문·이과 전교 1등인 쌍둥이 딸의 성적이 0점 처리된다면 다른 학생들은 등수가 올라가 내신 등급이 바뀔 수 있다. 회의에 참여한 학부모 B 씨는 "내신 등급의 경계선에 있는 학생들은 등수 하나 차이로 등급이 바뀔 수 있고, 갈 수 있는 대학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말했다. 그래서 올해 두 학생의 성적을 0점 처리해야 내년에 수시 지원을 할 때 다른 학생들에게 유리하다는 게 학부모들의 생각이다. 학부모 C 씨는 "퇴학은 나중에 시키더라도 성적 정정만큼은 학년이 바뀌기 전에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동아일보, 2018.10.23.).

이 기사는 학부모들의 이러한 목소리의 배경에 강남 8학군 지역의 치열한 내신 경쟁이 있음을 보여준다. 내신 성적이 바뀌면 내신 등급이 변하고, 그 결과 갈 수 있는 대학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부 기사에서는 해당 학생이 자퇴를 하느냐 퇴학을 하느냐에 따라 같은 학년 학생들의 내신 등급이 바뀌기(조선일보, 2018.11.9.) 때문에 해당 학생에 대한 퇴학 및 0점 처리가 공정하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경향신문, 2018.11.12.; 동아일보, 2018.11.12.)[21].

21) 이러한 요구들에 대해 학교는 2018년 11월 13일 해당 학생들의 성적을 0점으로 처리하고, 학생에 대한 퇴학, 교사에 대한 파면할 것을 건의하기로 결정(조선일보, 2018년 11월 13일)했다. 이에 따라 해당 학생들은 11월

이러한 절차적 공정성에의 집중은 결국 시험 절차에 대한 감시, 감찰,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귀결되며, 이는 학교교육을 둘러싼 기존 질서에 대한 치안과 보안(security)의 강화[22]로 연결된다. 언론보도에 나타난 '숙명여고 사태'에 관한 담론은 교육 공정성이 곧 절차공정성이며 이는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는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있다. 이는 심각한 대입 경쟁과 성적 지상주의, 학벌과 학력을 추종하는 한국 교육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을 유지·재생산하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비리를 저지른 해당 교사와 학생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 학교 공동체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물어 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합당한 요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학부모의 요구와 관련된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이 학교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것의 주요 내용은 해당 학생들의 성적 재산정을 통해 '공정한' 내신 성적이라는 결과를 얻으려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학부모들의 요구 속에서 중요하게 여겨진 것은 학교 전반의 신뢰 회복이나 윤리적 책무 제고 등의 문제보다는 자신의 자녀가 불공정한 내신 성적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교육 공정성은 개별 학생이 학업성적이라는 결과를 배분받는 데 있어 노력에 따른 보상을 적절하게 받는 문제에 집중되어있다. 그 결과, 학교교육을 둘러싼 구조나 교육 전반에서 고려되어야할 공정성의 문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는다.

2) 능력주의에 기반 한 절차공정성에 대한 강조

동아일보의 2019년 1월 16일자 칼럼에서는 '복면가왕'이라는 티브이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이 가면을 쓰고 노래 실력만으로 겨루는 것에 대해 "돈과 권력이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부정 청탁과 채용 비리가 만연한 사회에서 계급장 떼고 오로지 실력으로 겨루는 프로그램은 그 자체로 매력적"이라고 이야기했다. 여기서의 '공정성'은 공정한 절차가 능력에 따른 보상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절차공정성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능력에 따른 보상은 정당하다는, 교환이론에 기반한 초기 분배공정성 이론과 능력주의 이데올로기를 지지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비하여 "을과 을의 공정성 전쟁"이라는 칼럼(경향신문, 2018.11.18.)에서는 시험을 "능력주의 이데올로기와 결탁한 서열화 장치"이며 "객관적 차별 규칙"으로 본다. 왜냐하면 공정한 절차를 거친 시험 결과라고 하더라도 대학 시스템 자체가 서열화 되어 있고 이것이 불공정한 것이라면, 시험 자체의 공정성도 의심받을 만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드러난 교육에서의 공정성 논의에서 지배적인 흐름은 절차 공정성을 보다 완성

30일 퇴학 처리 되었고(조선일보, 2018.11.30.), 해당 교사는12월 21일 파면되었다(경향신문, 2018.12.21.; 조선일보, 2018.12.21.; 동아일보, 2018.12.21.). 그리고 해당 학생들이 속했던 학년의 성적은 그 학생들이 수시 지원을 하기 전인 2019년 2월까지 재산정하기로 결정했다(동아일보, 2018.11.13.).

22) 시험 절차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감시, 감찰, 통제의 강화는 곧 기존 질서에 대한 보안과 치안의 강화로 연결된다는 아이디어는 이 연구에 대한 사회평론가 박권일의 자문 의견에서 얻었다.

도 있게 견지하여 노력과 능력에 따른 보상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 즉 능력주의에 기반 한 공정성 논의이다. ‘숙명여고 사태’에 관한 언론보도의 지배적인 방향 또한 공정한 경쟁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교육 공정성 논의가 주목하는 것은 절차상의 공정이라는 사실을 드러낸다. 언론사에 따라 대입제도 개편의 방향이나 공정성 논의의 철학적 전제가 다르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방향성은 절차공정성을 확보한 학업성적의 공정성을 교육 공정성의 핵심으로 여기는 것이다.

여기서 강조되는 절차의 공정성은 미시적이고 체계적인 감시 하에서 학업성적 관련 비리가 일어나지 않음을 의미하며,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험 과정을 뜻한다. 이는 교육에서 ‘공정성’ 개념이 형식적인 절차상의 공정성으로 그 의미가 축소되고 단편화되는 것을 보여준다. 예컨대, 동아일보의 2018년 11월 16일 칼럼은 대입제도의 적절성을 논함에 있어 ‘좋은 제도’ 보다 ‘공정한 제도’가 중요하다고 표방하며, 교육 공정성 논의에서 형식적 절차 공정성이 어떻게 핵심적인 문제가 되는지를 드러낸다.

> 내신과 학종은 학교 교육을 살리고, 대학의 선발권을 확대하는 취지에서 강화된 것이기도 하다. 어느 방향으로 가더라도 운영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특히 입시의 영역에서는 ‘좋은 제도’보다 ‘공정한 제도’가 중요하다. 정당한 노력이 통하지 않는다는 젊은이들의 인식이 쌓이면 모든 게 허사이기 때문이다(동아일보, 2018.11.16.).

이러한 “공정한 제도”에 대한 지향은 수능 시험이 평가의 타당도 보다는 신뢰도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방향으로 자리 잡는 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교육 공정성 논의에서 중요시되는 것은 공정한 절차를 통한 경쟁, 능력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투명한 과정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입제도 개선의 지배적인 흐름은 정시 전형의 확대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숙명여고 사태’를 둘러싼 학부모들의 요구와도 연결된다. 여기서는 자신들의 자녀가 내신 비리로 인하여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곧 교육 공정성의 회복이기 때문에 절차공정성이 잘 보장된다고 여겨지는 수능 시험 위주의 정시 전형이 가장 바람직한 입시 제도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숙명여고 사태’에 관한 미디어 담론의 사회적 실천을 분석해본 결과, ‘숙명여고 사태’는 내신 성적 비리 사건이며,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사건이기 때문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주를 이룸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대책들은 주로 학교를 감시, 통제하는 방식이며, 관련 미디어 담론은 이러한 대책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절차공정성이 완비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유포한다. ‘숙명여고 사태’ 관련 미디어 담론이 능력주의에 기반 한 절차공정성이 지배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이데올로기를 반영함과 동시에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Ⅳ. 결론: 요약과 논의

1.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숙명여고 사태’에 관한 언론보도 분석을 통해 한국사회의 지배적인 교육 공정성에 관한 미디어 담론을 분석하고 그 의미와 한계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숙명여고 사태’에 관한 언론보도를 페어클로의 비판적 담론분석 방법을 통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텍스트 분석 결과, 관련 기사들이 빠른 호흡의 어조로 ‘의혹’, ‘확인’, ‘발견’ 등의 어휘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기사를 통해 문제유출 사실을 기정사실화하고, 이 사태가 단순히 한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대입제도 전반의 문제로 확대하는 경향과 관련된다. 둘째, 담론적 실천 분석 결과, 보수적 언론과 진보적 언론은 ‘숙명여고 사태’가 촉발시킨 대입제도 관련 입장이 대립적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부종합전형을 비롯한 수시 전향에 대해 비판적인 담론이 지배적임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사회적 실천 분석 결과, ‘숙명여고 사태’ 관련 미디어 담론은 이와 같은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험 절차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대책들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으며, 능력주의에 기반 한 절차공정성이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를 반영·구성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비판적 담론 분석 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강조되는 교육 공정성은 형식적 절차공정성으로 그 의미가 축소화, 단편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는 대학입시 제도와 같은 경쟁 절차를 공정하게 정비하면, 그에 따른 결과는 공정할 것이라는 믿음이 지배적이라는 사실도 드러낸다.

2. 논의와 시사점

절차적, 형식적 공정성을 중요시 여기는 교육 공정성 담론은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 현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 대다수의 시민들이 대입 경쟁에서의 절차적 중립성을 강조하게 되면, 학교에서는 내신 시험제도의 절차공정성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학교는 미시적인 감시체계를 만들어 작동시킬 것이고 이 과정에서 교사들은 평가에 대한 권한이 있는 교육자가 아니라 내신 성적 산출을 위한 ‘공정한’ 처리자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학교의 존재 의미, 학생의 배움과 성장, 사회 속에서의 학교의 역할 등에 대한 논의와는 거리가 있다.

특히, 대입제도로 대표되는 경쟁의 절차를 문제시하는 논의에 주목하게 되면, 공정한 경쟁 이후의 결과는 개인의 책임으로 여기기 쉽다. 김천기(2015, p.5)의 연구에서는 이를 “주류적 공정성 모델”로 명명하고, 형식적 기회균등과 능력주의가 결합된 시장자유주의 모델로 본다. 이 모델은 교육 기회가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무관하게 균등하게 주어질 수 있다는 믿음에 기반 해 있다. 이러한

교육 공정성이 지배적인 사회에서는 입시 경쟁에서 성공하지 못한 원인을 개인의 무능력과 불성실 때문이라고 여기게 되며, 학력과 학벌에 의한 차별 또한 노력과 능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여길 가능성도 높다.

그런데 '공정한 경쟁 절차'라는 주장에서 공정함의 의미는 입장과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절차의 공정함이라는 것이 어떤 상황이나 입장에서도 항상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컨대, 롤즈는 합의 당사자들이 '무지의 베일'을 쓰고 있는, '원초적 입장'을 가질 때에만 절차적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절차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앞서 서술한 '배분선호이론'이 증명하는 바와 같이, 실제로 개인들은 주어진 상황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가장 잘 충족될 수 있는 절차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대입제도 관련 논의에서 절차 공정성을 중요시하는 논의도 비판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어떤 전형이 보다 공정한 경쟁 절차를 보장하는가의 문제와 더불어 대입에 있어 보다 유리한 자원을 가진 집단은 누구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큰 틀에서의 공정성 논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절차적 공정성의 보장을 위해 시험절차에 대한 미시적인 감시체계를 정비하고 학교에 대한 감찰과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기계적이고 지엽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 내신 시험 비리를 비롯한 문제들은 학교의 폐쇄성, 비민주성으로부터 기인하는 바도 있기 때문이다. '숙명여고 사태'와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의 개정과 사립학교의 민주주의 실현이 필요하며, 이러한 제도 개선이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절차공정성 보장 방안이 될 수 있다.

교육 불평등에 관한 논의는 오래 전 Coleman(1966)의 주장을 여전히 유효하게 여기고 있다. 그것은 교육의 기회 평등은 단순히 '동등한' 출발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집단 출신의 학생들이 출발점에서부터 갖는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는 명제이다(신동준, 2013, p.191).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이 교육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차원과 수준의 불평등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섬세한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똑같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도 그 보상이 달라지도록 만드는 요인이며 절차적공정성 추구로는 극복되지 않는 것이다. 교육 공정성 담론이 절차공정성 논의에 집중되어 있을 때, 교육에서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만들어내는 구조적 불평등 문제는 간과하기 쉽다.

이런 맥락에서 2006년경부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대입 전형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2009년부터 몇 개 대학에서 이 제도가 도입되었다[23]. 고등교육 기관들은 이 대입전형을 통해 사회경제적

23) 기회균형 입학 전형이 한국사회에서 처음 등장한 것은 2006년(연세대학교)이었고, 2007년 교육인적자원부의 기회균등 할당제 도입 추진으로 본격화되었다. 이 제도의 도입 배경은 당시 심화되고 있었던 사회적 양극화의 해소를 위해 대학이 사회계층 이동(social mobility)의 주요 통로 역할을 해야한다는 논리였다. 이러한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아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는 2009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 가구의 학생 중 성적 우수자들을 정원 외로 선발했다(이혜정 외, 2019).

배경이 비교적 불리한 학생들에게 질 높은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왔다. 이러한 대입전형은 정시냐 수시냐의 문제를 떠나 최소수혜자의 교육적 이상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고, 절차공정성 논의를 넘어서는 교육 공정성 담론 구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절차공정성과 분배공정성을 강조함으로써 구조적 불평등을 간과하는 문제는 나아가 소수자에 대한 차별 의식과도 연결될 수 있다. 능력주의에 기반 한, 경쟁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강조는 사회구조상의 불평등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적극적 조치와 소수자 보호 장치들을 무능한 사람들의 '무임승차'와 노력한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로 의미화하기 쉽다. 이 무임승차에 대한 '징벌'이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혐오로 표출(천관율, 2018)되며, 이는 노력에 상응하는 정당한 댓가에 대한 요구로 정당화되기 쉽다. 뿐만 아니라 대입제도로 대표되는, 경쟁의 절차를 문제시하는 논의에 주목하게 되면, 왜 대다수의 학생들이 대입 경쟁에 참여해야하는지, 대입 경쟁이라는 구조가 갖는 한계는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기 어렵다. 나아가 한국의 공교육은 어떤 시민을 왜 길러내야 하는가와 같은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논의는 대입 경쟁이라는 당면 과제에 비하여 부차적인 문제로 여겨지기 쉽다.

따라서 교육 공정성 담론은 절차에서의 중립성, 객관성을 넘어 교육 결과를 불평등하게 만드는 여러 요인들에 대한 논의로 확장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불평등을 개선하고 극복하는 것을 교육 '공정성' 의미 확대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무엇을 왜 교육하는가에 대한 토론을 교육 '공정성' 담론의 중심에 두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대입 전형과 관련하여 보다 깊이 있는 분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24]. 이러한 논의의 확장을 위해서는 대입 전형의 문제를 절차공성성 논의로 축소시키지 않고 사회적 불평등과 능력주의의 문제까지 포함하여 보다 풍부하고 구체적인 의제들을 다루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히 정시 전형이냐 수시 전형이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어떤 대입 전형이 교육 평등을 실현하는 데에 긍정적일 수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 깊은 논의는 교육 공정성과 관련된 이후 연구 과제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24) 예컨대, 김천기(2015)의 연구에서는 주류적 공정성 모델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능력주의와 공정한 기회평등이 결합된 모델과 비능력주의가 공정한 기회평등과 결합된 모델을 대안적 공정성 모델로 제안한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대안적 공정성 모델로의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모델을 공정성 평가의 기준으로 채택한다면 점진적 변화는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지영, 소경희(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대한 미디어 담론 분석. **교육과정연구 34**(3), 1-27.

공현(2018). 탈능력주의 교육을 꿈꾸며. **오늘의 교육 47,** 14-26.

김봉석(2010). 불평등과 공정성에 대한 다차원적 검토.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pp.965-982.

김아미, 주주자, 조나영(2018).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교육정책의 비판적 담론 분석 연구.** 경기도교육연구원.

김영욱, 함승경, 김영지(2017). 세월호 침몰 사건의 미디어 담론 분석. **한국언론정보학보 83,** 7-38.

김정원(2017). 이제 '계층 사다리로서의 교육' 프레임을 폐기할 때가 되었다. **교육비평 40,** 218-243.

김천기(2015). 사회적 불평등 맥락에서 본 대학입학 기회배분의 주류적 공정성 모델 한계와 대안적 공정성 모델 탐색. **교육사회학연구 25**(4), 1-24.

박권일(2018). 오늘, 대학과 학력·학벌은 무엇인가. **오늘의 교육 47,** 27-38.

박종민(1997). 평등 및 공정성의 현실과 이상.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공정성.** 나남.

서덕희(2006). "교실붕괴" 이후 신자유주의 교육담론의 형성과 그 저항: 홈스쿨링에 관한 담론분석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16**(1), 77-105.

석현호(1997). 불평등과 공정성: 이론들과의 연계.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공정성.** 나남.

성연철(2018). '포용국가' 강조하며..."불평등 키우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 한겨레, 2018.11.1. 기사

신동준(2012). 교육 기회와 취업 기회는 공정한가: 한국 사회의 기회 공정성.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우리 사회는 공정한가.** 한국경제신문.

신동준(2013). 한국 사회의 기회 공정성에 대한 인식. **한국사회의 공정성 1990~2011.** 성균관대학교출판부.

신진욱(2011). 비판적 담론 분석과 비판적·해방적 학문. **경제와 사회 89,** 10-45.

엄석진, 윤영근(2012). 정부의 공정성에 대한 2개의 시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우리 사회는 공정한가.** 한국경제신문.

유성상, 권순정(2016). 비판적 담론 분석을 통한 혁신학교 언론보도 비교연구: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을 중심으로. **교육과학연구 47**(3), 67-97.

이혜정, 박진아, 남미자(2019). 빈곤 청년의 대학 비진학 경험에 관한 연구. **교육학연구 57**(2),

325-353.

조경원(1991). 롤즈의 정의론에 입각한 교육기회균등의 문제에 대한 고찰. **교육철학연구 9,** 109-125.

조용환(2001). **문화와 교육의 갈등-상생 관계. 교육인류학연구 4**(2), 1-27.

천관율(2018). 문재인 정부를 흔든 '공정의 역습'. **시사인 546호**(2018.3.5.) 기사.

황예랑·성연철(2018). '혁신적 포용국가' 들고나온 정부... 저출산·양극화 답 찾을까. 한겨레, 2018.9.4. 기사

홍수민(2019). 제2의 숙명여고? 서울 고등학교 9곳 의심 사례 적발돼. 중앙일보 2019.1.16. 기사.

존 롤즈/황경식 역(2003). **정의론.** 이학사.

존 롤즈/황경식 외 역(2010). **공정으로서의 정의.** 서광사.

Fairclough, N.(2012). Critical discourse analysis. In J. P. Gee and M. Handford(Eds), *Handbook of discourse analysis*(pp.9-20). Florence,Ky: Routledge.

〈분석 대상 기사 목록〉

일자	언론사	제목	분류
20180829	동아일보	숙명여고 쌍둥이, 정정 전 오답 9개 내신에 비해 모의고사 등수 낮아	보도
20180830	동아일보	박용진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교무부장 PC 정밀감식하면 결론 날 듯"	보도
20180905	경향신문	'쌍둥이딸 1등' 숙명여고 압수수색...'학종 불신' 사태로 번지나	보도
20180905	경향신문	[속보]경찰, '시험문제 유출 의혹' 숙명여고 교무부장 자택 압수수색	보도
20180905	조선일보	경찰, '쌍둥이 전교 1등 의혹' S여고 압수수색	보도
20180905	동아일보	[속보] 경찰, '시험지 유출 의혹' 숙명여고 압수수색	보도
20180906	동아일보	시험지 유출 의혹 숙명여고 압수수색	보도
20180907	경향신문	숙명여고발 학종 불신 "전수조사" 불 지펴	보도
20180910	동아일보	숙명여고 학부모들 "중간고사前 수사 끝내야"	보도
20180915	동아일보	'불신의 늪'에 빠진 학생들 "학교도 친구도 못 믿겠어요"	보도
20180918	동아일보	숙명여고 '쌍둥이 딸 1등' 前교무부장 피의자 조사	보도
20180919	경향신문	[속보]경찰, 숙명여고 문제 유출 의혹 전 교무부장 출국금지...쌍둥이 자매도 소환 계획	보도
20180919	조선일보	'문제 유출 의혹'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출국금지 두 딸 소환조사 전망	보도
20180926	경향신문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쌍둥이 내달 초 참고인 조사	보도
20180926	경향신문	[기자칼럼]계층이동 열망과 패자부활전	논평
20180926	경향신문	경찰, '시험문제 유출' 의혹 쌍둥이 자매 다음 달 초 조사	보도
20180926	조선일보	경찰, '시험문제 유출 의혹'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다음달 초 소환	보도

20180927	조선일보	‘시험문제 유출 의혹 사태’ 후 첫 시험 앞둔 숙명여고는 지금...	보도
20181001	경향신문	[숙명여고 사태로 본 대입 진단]“고교서열화는 연좌제 학종은 극악한 줄세우기”	기획
20181001	한겨레	“한국교육 10년 후퇴” VS “시민들의 염원 무시”	기획
20181006	경향신문	'숙명여고 문제 유출 의혹' 수사받던 쌍둥이 자매 중 1명 '호흡곤란'으로 병원행	보도
20181006	동아일보	숙명여고 쌍둥이 1명, 경찰 조사 받다 병원행 “호흡곤란 호소”	보도
20181008	동아일보	[단독]숙명여고, 이번엔 중간고사 재시험 논란	보도
20181015	경향신문	숙명여고 ‘문제 유출 의혹’ 쌍둥이 자매도 피의자 입건	보도
20181015	조선일보	경찰 '시험지 유출 의혹' 숙명여고 쌍둥이 피의자 전환	보도
20181015	조선일보	"휴대전화서 시험지 유출 정황" 숙명여고 쌍둥이자매 입건	보도
20181015	동아일보	경찰 “숙명여고에 쌍둥이 최근 성적 결과 요청”	보도
20181015	동아일보	경찰 “숙명여고 쌍둥이, 피의자로 입건” 문제 유출 사실로 결론	보도
20181016	조선일보	"휴대폰서 시험 메모" 쌍둥이 자매, 어떤 징계 받을까	보도
20181016	조선일보	아빠에게 시험문제 받았나, 숙명여고 쌍둥이도 피의자로	보도
20181016	동아일보	“숙명여고 쌍둥이 휴대전화서 ‘영어 문학’ 지문 나와 1학기 기말고사 문제와 동일”	보도
20181016	동아일보	[단독]“쌍둥이 딸 휴대전화서 시험문제 관련 메모 나와”	보도
20181017	조선일보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의혹' 쌍둥이 동생 입원 막바지 수사 차질	보도
20181018	경향신문	[2018 국감]서울과기대 편입한 아들, 교수 아버지 수업서 전부 ‘A+’ “대학판 숙명여고 사건”	보도
20181018	한겨레	서울 국립대서도 교수 아버지가 아들에게 A+ 의혹	보도
20181019	경향신문	[사설]교수가 아들에게 올 A+, 이번엔 국립대의 탈선	논평
20181019	동아일보	숙명여고 학부모 “교무부장 파면 쌍둥이 퇴학해야 전현직 교사 졸업생 성적 공개도”	보도
20181022	동아일보	[단독]“쌍둥이 휴대전화에 3과목 시험 정보”	보도
20181023	조선일보	경찰 '시험지 유출혐의' 숙명여고 쌍둥이 재소환 방침	보도
20181023	동아일보	[단독]학부모 “쌍둥이 0점 처리” vs 학교 “대법원 판결 기다려야”	보도
20181023	동아일보	[횡설수설/고미석]빗나간 父情	논평
20181024	동아일보	[단독]학부모 “쌍둥이 성적 0점 처리하라” 학교측 “대법 판결나야”	보도
20181026	동아일보	[단독]“쌍둥이 중간고사 몇등?” 숙명여고 초관심	보도
20181029	경향신문	“숙명여고 쌍둥이 1명 휴대폰서 영어 답안 메모 나와”	보도
20181029	경향신문	숙명여고 쌍둥이, 교내대회 싹쓸이 ‘총 44개 수상’	보도
20181029	경향신문	‘문제 유출’ 의혹 숙명여고 쌍둥이, 한 학기 만에 성적 우수상 늘어	보도
20181029	조선일보	숙명여고 쌍둥이 휴대전화서 '영어 정답' 나와...혐의 여전히 부인	보도
20181029	조선일보	숙명여고 쌍둥이 추가 조사 "2학기 중간고사 성적 확보"	보도
20181029	동아일보	숙명여고 쌍둥이, 성적우수상도 싹쓸이 언니, 1개→5개→8개	보도
20181030	동아일보	[단독]숙명여고 비대위 “쌍둥이 0점처리 왜 미루나”	보도
20181030	동아일보	숙명여고 쌍둥이 휴대전화서 영어시험 정답 메모 발견	보도
20181030	동아일보	변호사 “시험문제 유출 입증 시, 숙명여고 쌍둥이 처벌 불가피”	보도

20181101	경향신문	“숙명여고 쌍둥이 1학년 때도 시험문제 유출”	보도
20181101	동아일보	경찰 “숙명여고 쌍둥이, 문제유출 더 있다 수능 전 수사 마무리”	보도
20181101	경향신문	숙명여고 쌍둥이, 1학년 시험도 유출 의심...자택서 증거 확보	보도
20181101	조선일보	숙명여고 쌍둥이 집에서도 문제유출 정황 시험 전에 답만 메모되기도	보도
20181102	경향신문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교사 아버지 영장 신청	보도
20181102	경향신문	[세상읽기]글로벌 자본주의와 봉건적 세습주의	논평
20181102	동아일보	숙명여고 “쌍둥이 성적 재산정, 적법하게 처리할 것”	보도
20181102	경향신문	경찰, '숙명여고 시험유출' 전 교무부장 구속영장 신청 쌍둥이는 신청 안해	보도
20181102	조선일보	"숙명여고 쌍둥이 집에서 시험정답 적힌 메모 확보"	보도
20181102	조선일보	"시험문제 유출 혐의 상당" 경찰,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영장	보도
20181102	동아일보	숙명여고 쌍둥이 자택서 일부 과목 답 메모 발견	보도
20181103	경향신문	검찰, 시험 문제 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구속영장 청구	보도
20181103	조선일보	숙명여고 '쌍둥이 아빠 교사' 두달만에 구속 영장	보도
20181103	동아일보	숙명여고 쌍둥이 아빠 영장 신청 경찰, 시험문제-정답 유출 혐의	보도
20181104	경향신문	숙명여고 학부모, 엄정한 수사 요구 집회 "10년치 성적 감사하라"	보도
20181104	동아일보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답안 보관’ 교무실서 홀로 야근 증거인멸 정황도	보도
20181104	경향신문	숙명여고 쌍둥이 아버지, 시험답안지 보관한 교무실서 홀로 야근했다	보도
20181105	조선일보	'쌍둥이 딸 시험문제 유출 의혹' 숙명여고 前교무부장, 구속될까?	보도
20181105	동아일보	“숙명여고 쌍둥이, 태연하게 학교생활 잘 해 학생들 충격”	보도
20181105	동아일보	숙명여고 쌍둥이 아빠, 답안보관 교무실서 혼자 야근	보도
20181105	동아일보	[사설]사실로 드러난 숙명여고 사태 고교내신 신뢰 회복 시급하다	논평
20181106	동아일보	‘시험문제 유출 의혹’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구속	보도
20181106	경향신문	‘숙명여고 쌍둥이’ 아버지 구속	보도
20181106	경향신문	숙명여고 쌍둥이 아빠 전 교무부장 측 “직접증거는 없다”	보도
20181106	동아일보	숙명여고 쌍둥이 父측 “공부 열심히 해 성적 오른 건데 억울 끝까지 갈 것”	보도
20181106	동아일보	‘숙명여고 문제유출 의혹’ 쌍둥이 아빠, 포토라인 처음 서서 “진술은 법정서 ”	보도
20181106	조선일보	'숙명여고 시험 유출 혐의' 쌍둥이 아빠 구속 "증거인멸 우려"	보도
20181106	조선일보	[속보] '숙명여고 시험 유출 혐의' 쌍둥이 아빠 영장실질심사 출석	보도
20181106	조선일보	"법정서 말하겠다" '숙명여고 시험 유출 의혹' 쌍둥이父 법원 출석	보도
20181106	경향신문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의혹’ 쌍둥이 아빠 구속될까? 오늘 법원 영장심사	보도
20181107	경향신문	[경제와 세상]입시비극, 제도 문제가 아니다	논평
20181107	경향신문	수행평가 전원 만점, 결석해도 봉사점수, 시험 정답 39차례 정정	보도
20181107	동아일보	‘고2’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쌍둥이 딸, 수시로 대학가면 문제 복잡?	보도
20181107	동아일보	“숙명여고 쌍둥이 중간고사 등수, 입학 직후 수준으로 떨어져”	보도

20181107	조선일보	숙명여고 '쌍둥이 아빠 교사' 구속	보도
20181107	동아일보	숙명여고 쌍둥이 아빠 구속, 직접증거 없지만 ‘수상한 야근 오답’ 결정적 증거	보도
20181107	동아일보	‘숙명여고 문제 유출’ 쌍둥이 아빠 구속	보도
20181108	조선일보	[김광일의 입] 숙명여고 쌍둥이, 성적이 뭐기에	논평
20181108	조선일보	숙명여고 쌍둥이 자퇴 신청	보도
20181108	동아일보	숙명여고 쌍둥이 자퇴서 제출에 학부모 동문 집단 반발 “괴물 되는 길”	보도
20181108	경향신문	‘성적 조작’ 숙명여고 쌍둥이 자퇴서 제출	보도
20181108	동아일보	‘시험 유출 의혹’ 숙명여고 쌍둥이 자퇴서 제출	보도
20181108	동아일보	[사설]‘공정한 입시’ 뿌리 흔드는 구멍 난 내신관리	논평
20181109	동아일보	비대위 “숙명여고, 쌍둥이 자퇴서 제출 후 교문 걸어 잠가 퇴학시켜야”	보도
20181109	조선일보	'숙명여고 쌍둥이' 자퇴 퇴학 따라 2학년 수십명 내신등급 바뀌는데	보도
20181109	동아일보	숙명여고 학부모 “쌍둥이, 교과서 문제도 못 풀어 담임 덕 기율부장 봉사상”	보도
20181109	동아일보	“쌍둥이 자퇴는 괴물되는 길”, 숙명여고 학부모들 퇴학 촉구	보도
20181110	조선일보	[만물상] 숙명여고 사태	논평
20181111	조선일보	숙명여고 쌍둥이 언니, 국어 내신 107등→1등 오를 때 모의고사는 68등→459등	보도
20181112	경향신문	숙명여고 측 “전 교무부장 파면, 쌍둥이는 퇴학 및 성적 0점 처리”	보도
20181112	경향신문	시험지엔 ‘4 3 3 5 5’ 외운 정답 깨알 글씨로 옮겨 적은 흔적	보도
20181112	경향신문	[사설]숙명여고 사태, ‘정시 회귀’ 명분 될 수 없다	논평
20181112	경향신문	전국 초중고 감사결과 실명공개 한달 늦추기로	보도
20181112	동아일보	암기장에 전과목 답안이 숙명여고 쌍둥이 증거에 발목	보도
20181112	동아일보	숙명여고 정답 유출, ‘화학 교사가 의심하고 ’ 소문 사실로	보도
20181112	동아일보	숙명여고 “쌍둥이 퇴학 성적 0점처리 결정 전 교무부장 파면 건의”	보도
20181112	경향신문	학부모들 “비교과상 수상 놓친 학생들 구제방안도 마련을”	보도
20181112	동아일보	숙명여고 학부모들 “사필귀정 쌍둥이들 0점 처리 퇴학시켜야”	보도
20181112	동아일보	경찰 “숙명여고 쌍둥이, 5차례 유출 2학년 1학기 기말은 12과목 정답 유출”	보도
20181112	경향신문	숙명여고 쌍둥이 ‘전과목 정답 암기장’ 발견 쌍둥이 아빠 자매 기소의견 송치	보도
20181112	조선일보	"쌍둥이, 여섯번 시험 중 5차례 문제 미리 봤다"	보도
20181112	조선일보	[속보] "숙명여고 쌍둥이 5차례 문제유출" 교사아빠 쌍둥이 기소의견 송치	보도
20181112	조선일보	[속보] 숙명여고 "시험 유출 쌍둥이 성적 0점 처리, 퇴학 절차 진행 중"	보도
20181112	조선일보	숙명여고 학부모 "쌍둥이 0점 처리 퇴학 등 신속한 후속 조치 필요"	보도
20181112	조선일보	숙명여고 "쌍둥이 퇴학 교무부장 파면 절차"	보도

20181112	동아일보	숙명여고 쌍둥이 언니, 내신 107등→1등 될때 모의고사 68등→459등	보도
20181113	경향신문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성적 ‘0점 처리’ 결정”	보도
20181113	경향신문	극에 달한 ‘내신 불신’ 뾰족한 해법 없는 교육당국	보도
20181113	동아일보	우리 학교도? 숙명여고 사태 후 ‘내신부정’ 의혹 확산	보도
20181113	동아일보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꼬리자르기 안 돼 10년치 수시자료 조사해야”	보도
20181113	동아일보	조희연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같은 비리 안 나오게 ‘상피제’ 적극 시행”	보도
20181113	경향신문	조희연 “숙명여고 쌍둥이 즉각 퇴학 0점처리, 전 교무부장은 파면해야”	보도
20181113	조선일보	조희연 "숙명여고, 쌍둥이 학생 퇴학 교무부장 파면" 권고	보도
20181113	조선일보	숙명여고 문제유출 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가 수사	보도
20181113	조선일보	"쌍둥이 44개 상장도 다 조사해라" 숙명여고 '촛불' 안꺼지는 이유	보도
20181113	조선일보	숙명여고 "퇴학 조치 성적은 0점 처리"	보도
20181113	조선일보	숙명여고 교장 "쌍둥이 자매 0점 처리 결정...교무부장은 '파면' 건의할 것"	보도
20181113	동아일보	숙명여고 쌍둥이 작은 메모장, 친구들이 물어보면 “아무 것도 아냐”	보도
20181113	동아일보	숙명여고 2학년 전원 내년2월까지 성적 다시 매길듯	보도
20181113	동아일보	“정답 미리 외운 쌍둥이, 시험지 받자마자 깨알같이 적어놨다”	보도
20181113	동아일보	“쌍둥이에 5차례 시험 답안 유출”	보도
20181114	한겨레	인천 교사,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근무 못한다	보도
20181114	동아일보	[신문과 놀자!/피플 in 뉴스]하워드 가드너와 학생부종합전형	논평
20181114	동아일보	[사설]大入 신뢰 위기 속 치르는 수능, ‘내 안의 숙명여고’는 없는가	논평
20181114	동아일보	“우리 학교도 숙명여고 닮은꼴” 내신비리 고발 봇물	보도
20181114	동아일보	[단독]성적 조작해도 관리 책임자 ‘견책’뿐 시험지 도난 당해도 ‘경고’	보도
20181115	조선일보	의혹제기부터 '쌍둥이 퇴학'까지...숙명여고 74일간 '대책' 없었다	보도
20181115	동아일보	[광화문에서/신광영]교무부장 아버지가 쌍둥이 제자에게 남긴 것	논평
20181115	동아일보	[동아광장/김소영]‘밀레니엄 베이비’의 수능	논평
20181116	동아일보	[윤희웅의 SNS 민심]“학종 못 믿겠다, 전수조사 하라” 부글부글	논평
20181117	조선일보	[TV조선] 숙명여고 사태의 진실	논평
20181118	한겨레	[한겨레 프리즘] 을과 을의 공정성 전쟁 / 한귀영	논평
20181120	동아일보	정답 적힌 공책만으로 유죄 내신비리 정황증거 폭넓게 인정	보도
20181122	동아일보	학생부 조작 교사, 주의-경고 없이 무조건 징계	보도
20181127	한겨레	서울과기대 교수 아들 A+ 의혹 사실로 교육부 “중징계”	보도
20181127	경향신문	‘대학판 숙명여고 사건’ 교육부, 자녀 성적 특혜 의혹 서울과기대 교수 수사의뢰키로	보도
20181128	동아일보	교육부, ‘자녀 학점특혜’ 서울과기대 교수 수사 의뢰	보도
20181130	동아일보	‘시험지 문제 유출 의혹’ 숙명여고 쌍둥이 결국 퇴학	보도

20181130	경향신문	‘시험문제 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쌍둥이 딸 결국 퇴학	보도
20181130	경향신문	‘쌍둥이 딸에게 시험답안 유출’ 숙명여고 교무부장 구속 기소	보도
20181130	조선일보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쌍둥이 자매 퇴학 처리	보도
20181130	조선일보	'시험문제 유출' 숙명여고 교무부장, 구속기소	보도
20181201	조선일보	숙명여고 前교무부장 구속기소 학교측 "쌍둥이는 퇴학 처리"	보도
20181211	한겨레	교육부 “교육 현장 비리 뿌리 뽑아 신뢰 회복하겠다”	보도
20181212	조선일보	文대통령 "내신 학생부 공정치 못해, 수시는 깜깜이"	보도
20181213	조선일보	'숙명여고 시험 유출' 쌍둥이 아빠 측 "혐의 전면 부인"	보도
20181217	한겨레	문제 유출 학생부 조작 또 다른 ‘숙명여고’ 25곳 더 있었다	보도
20181217	한겨레	초중고 92%서 비위 사립에서 공립의 2배 적발	보도
20181217	경향신문	초중고 감사결과 보니 고교 시험지 유출 13건, 학생부 부실 관리 15건	보도
20181218	조선일보	내년부터 학생부에 '교과 우수상' 못 쓴다	보도
20181218	조선일보	숙명여고만이 아니었다, 고교 시험지 유출 4년간 13건	보도
20181218	동아일보	고교 시험지유출 4년간 13건 적발 교육부, 전국 초중고 감사결과 발표	보도
20181221	경향신문	숙명여고,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 유출’한 전 교무부장 파면	보도
20181221	조선일보	'쌍둥이 딸에 시험문제 유출 의혹'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파면	보도
20181221	경향신문	‘시험문제 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파면 확정	보도
20181221	동아일보	[단독]숙명여고 前교무부장 파면 확정	보도
20181225	한겨레	[이슈논쟁] 정시 확대하면 교실은 더 황폐해진다 / 김영식	논평
20181225	한겨레	[이슈논쟁] 내신비리 과당경쟁 부추기는 수시 반대한다 / 이종배	보도
20181225	경향신문	[해 넘기는 개혁](3)공교육 정상화 ‘길’을 잃었다	논평
20181225	동아일보	[단독]같은 고교 ‘교무부장-자녀’ 전국 47곳	보도
20181230	경향신문	[김진경의 교육으로 세상읽기]점점 더 커져만 가는 공교육 불신	논평
20181230	동아일보	반복되는 채용비리에 ‘분노’한 20대 “사다리 사라진 新계급사회”	기획
20181231	동아일보	“나는 알바, 아버진 자영업자” 고달팠던 청춘들	기획
20190116	동아일보	[신문과 놀자!/피플 in 뉴스]롤스의 ‘정의론’과 복면가왕	논평

* 논문접수 2019년 5월 2일 / 1차 심사 2019년 6월 10일 / 2차 심사 2019년 9월 3일 / 게재승인 2019년 9월 5일

* 이혜정: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 E-mail: nanbaram@gie.re.kr

Abstract

Analysis of Media Discourse on Fairness of Education*

Lee, Hae-J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meaning and limitations of educational fairness by critically analyzing media discourse on educational fairness. For this purpose, using the critical discourse analysis method of Fairclosure, we analyzed the media reports on "Sookmyung Girls' High School Situation' which caused a discussion of the fairness of the test procedure. As a result of analysis, the following facts were found. First, the text analysis shows that related articles repeatedly use vocabulary such as 'suspect', 'confirmation' and 'discovery' as a tone of rapid breathing. This is related to the tendency to expand the situation not to the problem of the school but to the problem of the whole university entrance system. Second, as a result of discursive practice analysis, although conservative media and progressive media were confrontational about the university entrance system, the dominant discourse was critical of the early admission. Third, as a result of analysis of social practice, the media discourse emphasizes the need for measures to strengthen the fairness of test procedures to prevent such situations.

Procedural and formal fairness-centered discourses on fairness will force schools to focus on ensuring procedural fairness through the objectivity and neutrality of test procedures, and the consequences of fair competition will be held accountable by individuals. And educational inequalities affecting educational outcomes are not overcome by the pursuit of procedural fairness. Thus, the discourse of fairness of education should be extended to the discussion of the factors that make educational outcomes inequality beyond neutrality and objectivity in procedure.

Key words: Educational fairness, Fairness of the university admission system, Education inequality, Critical discourse analysis

* This paper is a modification of a part of the research report, Gyeonggi Institute of Education's report, 『Light and Shadow of Education 'Fairness': Discourse Analysis on 'Sookmyung Girls' High School Situation'(2019)』.

** researcher, Gyeonggi Institute of Education